

생활·공업용수 수요 관리 종합계획 마련

- '물 부족 대비' 용역 최종보고회
...대체용수 개발 등 제시

2015년 충남도내 생활·공업용수 부족 사태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나왔다.

물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 누수 절감 및 요금 현실화, 하폐수 재이용, 대체용수 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12월 5일 도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구본충 행정부지사와 도내 16개 시·군 상수도 업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내 생활 공업용수는 ▲지방상수도 시설용량 감소 및 광역 시설용량 부족 ▲보령댐 제1호 시·군 용수 부족 ▲광역충남서부권 등 각종 신규개발 난항 등으로 2015년부터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1일 생활용수 여유량 60만5천㎥과 공업용수 의 생활용수는 2015년 1만5천㎥ 부족으로 돌아서고, 공업용수는 현재 22만㎥가량 여유가 있지만 2015년에는 1일 55만2천㎥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년에는 생활용수가 1일 24만1천㎥, 공업용수는 76만7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상수도 공급은 시·군별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배분계획 재조정 및 신

규 공급을 통해 해결하고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 우선 분배 ▲공업용수는 각 공단 공장별 중수도 설치 유도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상수도 누수 절감 및 유수 수량 증대를 위해 ▲2천270km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666km 신설 확충 ▲수도계량기 교체 15만2천개 누수 탐사 등을 실시한다.

절수기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만개씩 보급한다. 대체용수 개발을 위해서는 중수도 확대 설치, 신설 관공서 및 학교 빗물 이용시설 설치, 하폐수 재이용시설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인당 물 사용량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요금은 낮은 만큼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총 소요 사업비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764억원(유수율 제고 8천900억원 포함)으로, ▲중수도 보급 54억원 ▲절수기기 보급 16억8천만원 ▲빗물 이용시설 92억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에 169억1천만원 등을 투입한다.

충남도, 행정혁신 본격 돌입

-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계획" 발표

충남도는 21세기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고의 자치정부 구현"을 위한 충

남형 행정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행정혁신 추진 체계 구축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계획을 12월 1일 발표했다.

행정혁신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충남형 행정혁신 모델”을 정립, 일 잘하는 지방정부, 존경과 신뢰받는 공직상 정립과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공무원의 지식 전문 창의성을 업무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자기주도적 행정’ ▲정책 당사자와 전문가, 이익집단, 도민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행정’ ▲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종합 통합적 업무 처리로 효과를 거두는 ‘융·복합 코디네이션 행정’ 등을 제시했다.

추진단계로 민선5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10. 7~’11. 12)는 도입 조성기로 혁신업무 실천을 위한 모델을 정립 등, 2단계(’12. 1~’12. 12)는 실행 및 확산기로 분야별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3단계(’13. 1~’14. 6)는 혁신문화 정착기로 혁신과제 평가·환류를 통해 성과 창출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로, 행정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충남행정혁신위원회 설치 ▲혁신관리담당관 기능 강화 ▲행정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을 내용으로 행정혁신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민·관 협력체인 충남행정혁신위원회는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혁신과제의 발굴 및 채택 등 심의와 혁신정책 자문으로 혁신과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혁신실적 성과를 인사 및 보상체제와 연계하여 직무성장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혁신 친화적 조직을 정립하고 유동정원제 운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처하는 등 실적과 능력 중심의 발탁 승진 제도 활성화 등 기존 행정행태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충남형 행정혁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모임 등을 활용한 교육 및 사례 발표 ▲이행력 담보를 위한 ‘혁신 계약제’ 실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혁신 제안함’ 설치 ▲민간 주도형 ‘충남형 혁신포럼’ 출범 및 지원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 2012년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내화

- 4개 분야 9개 모델코스, 생태체험 추가, 홍보책자 제작 추진 -

“2012년 수학여행은 갯벌, 생태, 역사, 국악체험이 가능한 충남으로 오세유~ 체험학습 위주의 4개 분야 9개 모델 수학여행 코스 좋아유~”

충남도는 기존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해안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코스를 추가한 2012년형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수학여행 코스는 지난 8월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한 역

사·문화·생태·국악체험 위주로 개발했다.

특히, 직접 몸으로 체험하려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태안의 만대마을, 벚가리마을, 별주부마을 등에서 어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 코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에 개발한 수학여행 코스를 책자에 담아 홍보할 계획인데, 기존의 홍보물과는 달리 기행문 형식으로 충남의 관광지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숙박시설, 맛집, 여행 팁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을 생각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책자는 서울시 및 각 시·도 교육청 등에 배포해 내년 봄, 가을 수학여행 최적지가 충남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도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학여행 모델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는 한편, 수학여행 관계자 팸투어를 추진하고, 수학여행단에게 제공할 홍보용 팸플릿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백제역사·문화, 해양, 생태, 갯벌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관광코스가 수학여행단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학여행 코스를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홍보책자와 다르게 충남의 관광지를 재미있는 기행문 형식으로 꾸미고 숙박시설, 맛집, 여행 팁 등을 담은 홍보책자도 수학여행단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농혁신, 대한민국의 뿌리 살리지는 것”

— 안희정 지사, 11월 28일 한농연
한여농 도 임원과 간담회 가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1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농연 및 한여농 도 및 시군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3농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농민단체 임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한농연과 한여농 도 임원과 시군 회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농혁신 설명과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3농혁신 설명은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혁신위원회 허승욱 위원장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경위와 11개분야 347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맡았으며 안희정 지사는 모두발언과 간담을 직접 주재하면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개선되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우리의 뿌리인 농촌의 미래 없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



기 때문에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3농혁신은 기존 농업정책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것으로, 이는 농업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와 산업, 경제, 마을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융·복합된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어 “농업은 농촌을 살릴 수 없지만, 농촌은 농업을 살릴 수 있다”며 농촌을 농업인의 공간이 아닌 도시민과 함께 공유해가는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인식과 “친환경 급식 등 지역 소비자와 순환식품체계 형성, 유통망과 공급망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충남도, '12년 국·도 비지원 축제 선정 심사

— 문화관광축제 추천 대상 7개, 도비 지원 향토문화축제 순위 결정

충남도는 11월 22일, 제3차 축제육성위원회(위원장 박웅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2012년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7개 축제를 추천키로 했다.

내용을 보면, 올해의 기존 4개 문화관광축제로 당연 추천 대상인 ▲천안 홍타령춤축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발효젓갈축제 ▲서천 한산 모시문화제 ▲예산 옛이야기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홍성 내포문화제가 이번 심의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추가되었다.

아울러, 도는 내년 도비를 지원할 향토문화축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 7개 추천 축제 외에 나

머지 12개에 대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한 청양 칠갑문화축제는 통·폐합 지원 축제로 결정했다.

심사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모를 거쳐 시장·군수 등이 추천한 축제 가운데, 기존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하고 제안 설명과 서류 심사를 통해 비공개 일괄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지켰다. 특히 이번 심사는, 충남도의 기본 방침인 ‘민간 주도·자립형’ 축제 육성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주민 참여도와 자립도에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는 12월 중순 경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 향토문화축제는 중앙 탈락 축제를 포함하여 이미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저절로 결정이 된다. 등급별로 ▲최우수 1개 ▲우수 1개 ▲유망 1개 ▲예비 등 모두 7~8개 정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원액이 정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축제 심의는 새로운 채점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 해당 시·군에서 제안 설명에 열의를 보이는 등 관심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道 대표축제는 민간·자립형을 지향하는 축제가 선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중인 일몰제에 준하는 가칭 휴면기를 도입하려던 방침은 내적 동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도입하지 않고, 현행 지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의 내발적 발전 연구 역량 한데 모았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13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2011 행복 충남 실현을 위한 내발적 발전 전략 연구보고 및 제안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본충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 충남도의회 의원, 각계 전문가, 연구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전 1부 순서에서는 올해 추진된 20건의 전략과제 중 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과 연계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6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오후 2부에는 연구원 내외에서 제안된 총 9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22건을 대상으로 내년도 전략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는 ▲지방행정 ▲지역도시 ▲지역경제 ▲농촌농업 ▲문화디자인 ▲환경생태 등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총발연 연구진과의 과제별 종합토론을 거쳐 전략과제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총발연 관계자는 “내년도 전략과제는 12월 말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비록 심사에서 탈락한 과제라 할지라도 연구성격에 따라 현안과제, 수탁과제, 연구조성사업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앞으로 연구원의 전략과제가 도 및 시·군정을 선도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내발적발전 모색 위해 아시아 4개국에 한 자리에

— 충남발전연구, ‘내발적발전을 위한 아시아의 도전과 실천’ 국제심포지엄

지역의 내발적발전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4개국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8일 대전레전드호텔에서 개최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화의 물결속에 불어닥친 양극화와 지역의 불균형 문제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초국적자본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포섭되지 못한 농어촌지역과 중소도시의 경쟁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기조연설 “세계화와 지역의 대응; 충남의 내발적 발전을 중심으로”를 시작으로, 일본 동경농공



대학 센가 유타로 교수의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내발적 발전”, 중국인민대학교 왕지강 교수의 “지역재개발(CRR)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방법 연구”, 필리핀 마닐라대학교 저멜리노 M. 바티스타 교수의 “필리핀 농업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의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의 지역 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 충청남도 남궁영 경제통상실장, 충북발전연구원 이경기 연구실장, 공주대 정환영 교수, 중도일보 조성남 주필, 서울대 최영찬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의 올바른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세계화에 밀려 있는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내발적발전을 제시하고, 각국의 정책현황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해 관련정책연구에 반영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농업 · 농촌 · 농민문제 함께 풀어보자

— 11월 18일, 충남발전연구 · 지역
재단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합
동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은 지역재단,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농업 · 농촌 · 농민문제 해결의 길”이란 주제로 합동워크숍을 가졌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청양군 칠갑산휴양림에 모인 60명의 연구진과 현장활동가들은 한국 농업 · 농촌 ·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책 마련과 실천을 강조했다.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기조강연에서 “대형유통자본에 의한 자영업자의 몰락과 중소기업 및 농촌경제의 쇠퇴는 삶의 공간인 지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환경과 주민의 삶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과 지역력(지역의 문제를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인식, 자율과 협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가치를 창조해 가는 힘)을 키우기 위해 ▲친환경 농업 확대와 로컬푸드 체계 구축 ▲지역특화 · 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사회적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지역문화 기반의 소프트파워 강화 ▲지역리더 양성과 귀농귀촌, 도농교류 활성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도 및 시 · 군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농업은 시장의 원리가 아닌 협동

과 연대가 관건”이라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사회를 만들기 위해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 그리고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는 농업·농촌을 생명의 기초이고 원천이며, 식량만을 생산하는 단순한 산업, 공간이 아니라고 말해왔으나, 오늘날 이러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공공적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농업의 가치와 기능, 공공적 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식량생산, 식품소비, 그리고 국민건강에 이르기까지 농업·농촌과 관련한 지속적인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황민영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진행으로 친환경유기농업운동의 현황과 생산자조직의 과제 ▲로컬푸드·공공급식과 대안 먹거리 운동 ▲당면 충·

대선 정세와 대안농정 의제 ▲현 단계 농민운동의 과제와 실천대안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리더 양성 과제 등 농업·농촌·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한 발표와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충남발전연구,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 개최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수도권 기업유치 등 국토균형발전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객관적 평가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 예방과 상생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열렸다.

충남발전연구원과 한국공간환경학회, 그리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충남·충북발전연구원과 충청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11월 2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토론회”와 12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와 대응 과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11월 2일에는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 중앙대 마강래 교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과 중부대 강현수 교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 치유 및 상생협력 방안” 주제발표

가 있었다.

이어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 목원대 박경 교수, 세종대 변창흠 교수,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 연합뉴스 이은파 부장, 국회 이창호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대학교 김안제 명예교수(현.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는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활동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과밀·과소의 폐단과 비경제성을 증가시키며, 지역간-주민간 갈등과 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 규제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그간 추진되어 온 세종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이므로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 간 차별화를 도모하는 시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은 “수도권 정책 논리의 바람직한 판단기준은 단기적인 정책목적이나 특정집단·지역의 이해보다는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 잠재력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국가발전기반의 확보’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은 자기 지역만의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교역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2월 6일에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기조강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를 시작으로,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의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정책 평가와 개선 과제”, 정준호 강원대 교수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순재정 편의 추정”, 그리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의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제고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의 좌장으로 강현수 중부대 교수,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수상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장, 김홍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사무국장, 변용환 한림대 교수, 송우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종훈 한겨레신문 기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쳤다.